

韓國經濟와 經濟民主化

金 德 中*

.....〈目 次〉.....

- I. 序
- II. 韓國經濟의 主要問題點
- III. 課題와 展望

I. 序

그동안 ‘經濟民主化’와 關聯하여 理念的인 問題에서부터 출발하여 韓國經濟의 制度, 政府의 成長政策, 部門別 問題點, 所得分配 등 韓國經濟와 關聯된 거의 모든 側面이 論議되어 經濟民主化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民主化가 過去의 權威主義의 政治, 社會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했듯이 經濟民主化 論議는 대체로 過去의 經濟運用이 政府主導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서 個別經濟主體, 특히 勞動者, 農漁民, 中小企業 등의 意思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는 經驗에서 그 출발점을 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經濟民主化의 課題 역시 政府의 規制와 干涉을 줄여가는 한편, 經濟活動의 機會를平等하게 하고 個別經濟主體의 입장과 권익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自由로운 競爭에 기초한 市場經濟秩序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經濟民主化自體는 韓國社會全般에 걸친 民主化趨勢의 일환인 만큼, 經濟外的인 側面, 즉 政治, 社會, 文化的인 要素까지 積極的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論議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本稿에서는 우선 韓國의 經濟成長過程에서 나타난 韓國經濟의 主要特徵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經濟民主化는 持續的인 經濟發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經濟民主화의 課題를 設定하고 이를 展望하고자 한다.

* 西江大學校

II. 韓國經濟의 主要問題點

韓國經濟는 지난 25여년간 괄목할 만한 持續的 高度成長을 이룩해 왔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經濟課題를 보기 위해 먼저 지금까지의 成長過程에서 일어난 問題點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經濟成長과 投資財源調達

그러면 高度經濟成長을 達成하는데 所要되는 投資財源은 어떻게 調達되었는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度經濟成長目標의 達成은 우리 나라의 有效國內資源에 閣주어 볼 때 매우 높은 水準이었다. 韓國開發研究院(KDI)의 研究결과에 의하면 1962~82年期間 동안 年平均 經濟成長率 8.2%중에서 國內貯蓄이 成長에 기여한 뜻이 4.9%, 海外貯蓄이 成長에 기여한 뜻이 3.3%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海外貯蓄의 成長寄與率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던 결과 外債가 500억 달러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外債는 최근들어 감소하여 현재는 355억 달러 水準에 달하고 있다.

<表-1> 韓國經濟의 成長과 構造的 變化

	62~66	67~71	72~76	77~81	82~86	1985	1986 P	1987 *
G N P 成長率 (%)	7.8	9.6	9.7	5.8	8.6	5.4	12.5	12.2
輸出 (억 \$)	2.5	11	78	207	336	303	347	452
輸入 (억 \$)	6.8	22	84	243	293	311	316	382
總投資率 (%)	21.6	25.1	25.6	30.3	29.5	31.1	30.2	29.3
國內貯蓄率 (%)	11.8	14.6	23.9	20.5	32.5	28.6	32.8	35.8
失業率 (%)	7.1	4.5	3.9	4.5	3.8	4.0	3.8	3.3

註 : * 推定值(韓國銀行, '週刊內外經濟', 1987.12.26, 1988.1.2)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7.

2. 對外依存的 經濟構造

對外依存的 經濟構造의 問題로서 흔히 말하는 經濟의 海外依存 및 對外從屬과 關聯된 問題이다.

일반적으로 經濟成長에서 輸入은 成長에 필요한 生產要素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經濟理論에서도 經濟成長과 輸入은 正(+)의 函數關係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 經濟成長과 輸入은 高度成長目標의 推進으로 인하여 더욱 밀접한 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經濟成長의 指標로 사용되는 國民總生產에서 輸入이 차지하는 比重, 즉 輸入依存度는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7年 22.4% 였던 것이 1986年 39.8%로 增加하였다. 絶對規模面에서도 1967年 10억 달러에 불과하던 輸入額이 1986年 315억 달러를 넘어 섭으로써 31배로 增加하였다.

〈表-2〉 輸入依存度推移

(단위: 백만 달러, %)

	輸入額	輸入依存度
1967	996.2	22.4
1975	7,274.4	38.4
1986	31,583.9	p) 39.8

資料：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7.

또한 韓國經濟의 輸入構造를 보면 總輸入中 95% 정도가 成長에 直接 필요한 에너지, 原資材, 機械設備 그리고 國民生活水準維持에 직결되는 食糧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輸入 중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原資材로서 현재까지 매년 總輸入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原油를 비롯하여 原糖, 原毛, 생고무 등은 國內需要의 전부를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며, 그 밖에 主要基礎品目の 對外依存度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生產構造가 重化學工業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資本財輸入은 계속 增加하여왔다. 즉, 總輸入 중 資本財가 차지하는 比重이 1970年에는 30%였으나, 1986年에는 36%로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消費財의 輸入比重은 1970年 17%에서 1986年 10%로 계속 減少하는 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消費財輸入도 절반의 國民들의 기본생활과 직접 관련된 糧穀導入이라는 데 있는 바, 糧穀導入의 絶對額을 봐서도 1986年度 11억3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韓國經濟가 高度成長을 계속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產業生產에 필요한 物資의 輸入增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表-3〉 用途別 輸入

(단위 : 백만 달러, %)

	1970		1980		1986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總 輸 入	1,984	100	22,292	100	31,584	100
原 資 財	1,049	53	14,480	65	17,166	54
(原 油)	(125)	(6)	(5,632)	(25)	(3,346)	(20)
資 本 財	589	30	5,125	23	11,340	36
消 費 財	346	17	2,687	12	3,078	10
(糧 穀)	(245)	(12)	(1,092)	(5)	(1,138)	(4)

資料：經濟企劃院, '韓國經濟指標', 1987.10.

한편, 高度成長에 所要되는 財源을 마련하기 위한 外貨獲得을 위해서 輸出增大가 필수적이었다. 즉, 輸入을 위해 필요한 外貨는 물론이거니와 매년 累積되어 온 外債의 元利金償還을 위한 外貨가 必要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86年 現在 GNP中에서 輸出과 輸入이 차지하는 比重을 나타내는 對外依存度는 82%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國際貿易이 韓國經濟에서 중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國際經濟與件의 조그만한 變化에도 韓國經濟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經濟成長戰略과 企業

일반적으로 成長戰略은 公企業을 為主로 하는 경우와 民間企業을 為主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의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이켜 보면 公企業 為主의 成長戰略은 대체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政策當局은 이 점을 인식하여 1970年代부터 시작된 經濟開發에 있어서 重化學工業, 防衛產業 등의 基幹產業에 民間企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970年代 후반부터는 輸出增大를 위해 綜合貿易商社를 中心으로 하는 成長戰略을 選擇하였다. 그 결과 重化學工業 中心의 產業構造와 大企業의 比重이 커지고 相對的으로 中小企業의 發展이 늦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中小企業의 相對的 比重이 減少되어 1960年에는 中小企業의 業體數에서 99.1%, 從業員數에서 76.1%, 그리고 附加價值에서 66.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5年에 와서 中小企業의 業體數比重은 99.5%로 거의 비슷하지만, 從業員數의 比重이 64%로 줄어들었고, 附加價值의 比重은 36.5%로 크게 줄어들었다.

〈表-4〉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事業體數, 從業員數 및 附加價值 比較

(단위 : %)

	事業體數			從業員數			附加價值		
	計	中小企業	大企業	計	中小企業	大企業	計	中小企業	大企業
1960	100.0	99.1	0.9	100.0	76.1	23.9	100.0	66.5	33.5
1973	100.0	95.5	4.5	100.0	39.4	60.6	100.0	27.2	72.8
1985	100.0	99.5	0.5	100.0	64.0	36.0	100.0	36.5	63.5

註：從業員 5人 이하의 業體

資料：中小企業振興工團, '中小企業經濟指標', 1987.

4. 所得分配

그간 우리나라에 있어所得分配問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감이 없지 않다. 이 점은 아직도 우리나라의所得分配狀態에 대한 일관된 견해가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外國의經濟學者들에 의해 우리나라의分配問題가 연구되었으며, 여기에 근거자료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의 결함에도 불구하고韓國은 다른開途國에 비해成長과衡平을 잘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世界銀行과英國‘서섹스’大學과의 공동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되었던 66개국 가운데에서 우리나라是階層別所得隔差가 가장 낮은‘그룹’에 속하고 있다. 반면國內에서는韓國經濟가 그간高度成長을 위해서分配의衡平을 무시해 왔으므로 이제는分配問題에 관심을 돌릴 때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國民들의社會的共感은個個人의所得水準이社會正義에相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그간의高度成長이絕對的貧困을 타파하고國民生活水準의向上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所得分配狀態를 보면下位40%에 속하는所得階層의所得이全體所得에서 차지하는比重, 즉所得分配率이1965年 19.34%에서 1985年 17.71%로減少한反面에上位20%의所得分配率은 같은期間 41.81%에서 43.71%로增加함으로써所得分配構造의改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5〉 階層別 所得分布

	1965	1968 70	1976	1982	1985
上位 20% (A)	49.81	41.62	45.34	42.89	43.71
下位 40% (B)	19.34	19.63	16.85	18.80	17.71
十分位分配率 (B/A)	0.4626	0.4716	0.3716	0.4373	0.4052
지니系數	0.3439	0.3322	0.3908	0.3574	0.3631

자료 :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6.12.

_____,'經濟白書', 1986.

이와 더불어 유의해야 할 것은 그 동안의 成長의 效果로 絶對貧困問題는 크게 해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生活維持가 극히 어려운 勞動無能力者를 포함한 生活保護對象者가 1986年末 기준으로 總人口의 5.3%에 이르는 217만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事後的으로 所得再分配機能을 있다고 알려진 租稅體系에 있어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租稅收入 중 所得에 대하여 逆進的인 효과를 초래한다고 알려진 間接稅의 比重이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에 直接稅의 比重이 너무 낮다는 사실이다. 1970年代 초에는 直接稅와 間接稅의 比重이 50:50으로 비슷한 水準이었으나, 매년 間接稅의 比重이 점차 커가는 趨勢를 보이다가 1977年 附加價值稅制(value added tax)가 導入된 以後 問題稅의 比重이 크게 높아졌다. 그후 지금까지 間接稅 對 直接稅의 比率이 대략 60:40의 水準을 維持해 옴으로써 間接稅 中心의 稅收構造를 보이고 있다. 두번째로 所得稅에 있어서 所得源泉別 課稅所得捕捉率을 보면 勤勞所得의 경우 1983年 捕捉率이 75.0%로 財產所得인 賃料, 利子, 配當所得捕捉率을 보면 勸學所得의 경우 1983年 捕捉率이 75.0%로 財產所得인 賃料, 利子, 配當所得捕捉率 32.1%를 輛씬 上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特徵은 相續稅와 贈與稅가 1985年 實績으로 內國稅의 0.7%, 直接稅의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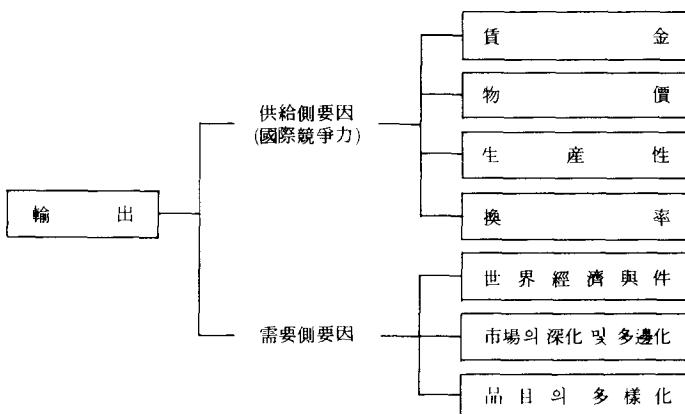
III. 課題와 展望

위에서는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에서 나타난 主要 特徵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韓國經濟의 課題를 어떻게 設定해야 하겠는가? 현재 우리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政治, 經濟, 社會的 與件에 비추어 볼 때 高度經濟成長은 持續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假定을 우선 받아들이고자 한다. 즉, 高度經濟成長을 통하여 막대한 國防費支出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雇傭機會를 創出시킴으로써 窮極的으로 社會安定에 寄與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러한 高度成長을達

成하는 데 必要한 投資財源調達에 있어서 過去에는 海外貯蓄(外債)에도 依存해 왔으나, 最近에 들어 國內貯蓄이 增加하여 1986年에는 32%의 水準에 이르렀고 87年에는 36%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7~8%의 持續的인 經濟成長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現在 韓國經濟의 輸入構造를 보면, 總輸入中 95%정도가 成長과 國民生活水準維持에 직결되므로, 결국 輸入財源과 그동안 累積된 外債의 원활한 債還을 위한 外貨獲得을 위해서는 輸出增大가 매우 중요한 課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은 國際競爭力を 좌우하는 貨金, 物價, 生產性 등의 供給側要因과 國際經濟與件, 市場의 深化와 多邊化, 品目의 多樣化 등의 需要側要因에 의해 決定된다.

<그림-1> 輸出要因



그런데 아직도 過去처럼 國際競爭力 提高의 側面에서 政府의 政策支援으로 輸出増大가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輸出増大를 위한 換率政策, 貨金上昇抑制, 輸出補償制度, 租稅 및 金融特惠 등의 政策手段이 限界에 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貨金引上을 抑制하는 것은 勤勞者의 生活水準에 대한 期待가 높아졌다는 점과 低所得層에 대한 分配問題를 감안할 때 限界가 있다. 換率面에서 볼 때도, 80年代 초반과는 달리 중반 이후에는 원貨가 주요결제통화인 달러화에 대해서 切上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결정에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가미된다 하더라도 對外與件, 특히 확대되는 對美貿易黑字로 인한 美國의 壓力때문에 運身의 幅이 작아지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現實이 되고 있다. 韓國의 輸出規模가 4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10%의 輸出支援額은 45억 달러가 되므로 이러한 金額과 政府豫算規模를 비교하고 또한 物價安定目標를 고려할 때 輸出支援制度를 통한 輸出增大的는 어려우며, 世界 12大交易國에 이른 現時點에 비추어 볼 때도 政府의 輸出增大的를 위한 어떠한 補助도 對外的인 報復措置만을 야기시킬 것이다. 결국 政府의 役割은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輸出市場의 多邊化, 輸出商品의 多樣化, 市場開放에 따른 國內市場 競爭의 強化, 그리고 技術水準의 向上에 달려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高度成長을 위한 輸出增大的는 過去처럼 政府가 중점을 두었던 供給側要因에서 보다는 需要側要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활동의 성패는 民間企業의 自律的이고 積極的인 態度와 遂行能力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中小企業은 商品의 高級化, 多樣化를 추구하고, 部品이나 素財의 供給業體로서 成長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民間企業의 活動은 輕工業爲主의 輸出構造를 갖고 있던 過去에는 가장 중요한 役割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輸出商品構造가 技術集約的이고 勞動의 質이 중요시되는 重化學工業, 尖端產業製品으로 전환되어 가는 양상을 띠어갈 것으로 단지 政府主導에서 民間企業中心으로의 方向轉換은 輸出增大的에 있어서 必要條件만을 충족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方向轉換과 함께 여기서 補完의이라 할 수 있는 充分條件은 무엇인가? 그것은 勞使者도 企業活動에 '同參'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며, 바로 이것이 經濟民主化의 核心的 課題라 할 수 있는 勞使關係의 원만한 運用인 것이다. 즉, 勞動者의 成就動機를 만족시키고 勤勞意慾을 복돋아주는 方向에서 勞動組織을 잘 形成시키고 이를 強化시켜 가면서 勞動者의 權益과 勞動條件, 더 나아가서는 勤勞者의 福祉向上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勤勞者의 勤勞意慾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要因은 무엇이겠는가? 먼저 勤勞者의 實質生活水準向上側面을 보면 1971~86年 기간에 年平均 名目賃金上昇率은 20.87%를 기록하였으나 여기에 物價上昇率을 고려한 實質賃金上昇率은 7.36%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82年 이후 實質賃金引上率은 年間 6.8%로서 1971~81년 기간의 7.61%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實質賃金의 上昇率이 勞動生產性의 上昇率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86年 기간에 實質賃金과 勞動生產性의 變化를 비교해 보면 實質賃金의 上昇率이 勞動生產性의 增加率보다 약 3.09% '포인트'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產業間, 職種間의 賃金隔差, 그리고 상당수의 低賃金 勤勞者의 存在가 勤勞者 不滿의 보다 중요한 要因이 되어 왔다.

〈表-6〉 角木賃金과 實質賃金의 變化

(단위 : 198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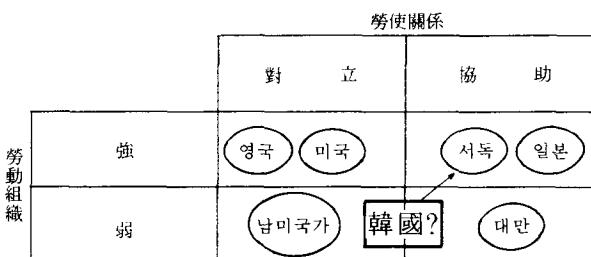
年 度	名 日 賃 金		實 質 賃 金		勞 動 生 產 性	
	指 數	增加率	指 數	增加率	指 數	增加率
1971	11.7	15.8	46.4	1.7	41.9	8.8
1975	26.1	29.2	57.8	3.4	59.7	10.8
1982	139.7	15.7	107.4	7.9	125.3	7.2
1986	1199.3	8.2	138.2	5.8	187.8	12.7
1971~81 平均上昇率	25.55		7761		10.66	
1982~86 平均上昇率	10.58		6680		9.97	
1971~86 平均上昇率	20.87		7736		10.45	

資料：韓國貿易協會，‘韓國經濟의 主要指標’，1987.

뿐만 아니라, 勞使關係側面에서도 最近 크게 論亂이 일고 있는 바, 바람직한 勞使關係의 定立이 勤勞者의 積極的인 ‘同參’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勞使關係의 類型은 勞使關係가 對立的이거나 協助的이거나에 따라서, 그리고 勞動組織이 잘 組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략 네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이 〈그림-2〉에 요약되어 있는데, 각 類型에 가까운 대표적인 나라들이 예시되고 있다.

〈그림-2〉 勞使關係의 類型



그러나 바람직한 勞使關係를 定立하기 위해서는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勞使關係가 英國이나 美國과 같이 對立的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西獨이나 日本처럼 協助的일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方向 중에서 어떤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決定해야 한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勞使關係가 對立의in 類型으로 가는 것을 假定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韓國經濟의 開放程度나 불확실한 國際與件을 고려해 볼 때, 協助의in 類型으로 가는 것일 바람직하지 않나 한다. 그러므로 勤勞者, 經營者, 그리고 政府는 이러한 관점에서 勞使問題를 보고 또한 바람직한 方向으로 다같이 努力を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勤勞者들의 勤勞意慾與件으로서의 所得分配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否定의in 側面이 없지 않다. 1985年度 우리나라 國民所得 중 55%정도가 被傭者報酬에 그치고 나머지 45%는 財產所得이나 利潤의 形態로 分配되고 있다. 國民所得 중 勤勞所得分配率이 先進國인 OECD 24個國의 경우 平均 7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 比率이 相對的으로 낮은 水準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現行의 租稅制度를 개편하여 租稅의 衡平機能을 強化하는 한편, 實名制實施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政策決定의 民主化, 혹은 分權化가先行되어야 비로소 可能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政治指導層 혹은 既得權者들의 讓步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教育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過去의 韓國經濟의 成長源泉을 요인별로 살펴 보면 단순히 生產要素의 量의in 增加로 인한 것 이 60%, 生產性의 增加로 인한 부분이 40%였음을 나타냄으로써 生產要素의 量의in 增加가 生產性의 增加보다 經濟成長에 더 크게 寄與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美·日 등 先進國의 경우 生產性 增加의 經濟成長에의 相對의in 奇異度가 60~70%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生產性增加의 成長 奇異率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간 韓國經濟가 勞動集約의 輕工業과 技術이 중요한 產業이라도 단순히 組立機能만 있으면 되는 產業에 의해 主導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國際競爭力を 提高하기 위한 노력으로 產業構造가 勞動集約的 產業에서 重化學工業과 半導體, 維傳工學, 컴퓨터 등 尖端技術(high-technology)을 요구하는 技術集約의in 產業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 生產性向上과 相對의 重要性도 점차 增加하고 있는 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技術水準의 向上과 勞動의 質, 즉 教育은 韓國經濟의 持續的成長을 위해 매우 重要하다 하겠다. 특히 國際化, 開放化, 民主化 趨勢에 비추어 볼 때 閉鎖的 思考方式에서 汎世界的이고 開放의in 思考와 態度로서 轉換이 必要하다고 할 수 있는데, 時代에 맞는 教育은 이러한 價值觀을 심어주는 한편, 技術水準의 向상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必須의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輸出增大 등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은 앞으로 크게

縮小되어야 할 것이며, 단지 政府의 活動은 民間企業의 活動을 위한 政府方向의 提示나 制度의 變化에 局限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각 個別經濟主體들의 意思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市場經濟制度의 活性화이자 經濟民主化의 核心的 課題라 하겠다.